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점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팀장

yskim@kiet.re.kr

## I. 머리말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산업 육성 및 선도프로젝트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핵심으로 한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수립 등이 그것인데,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 새로운 전환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광역경제권의 설정 자체는 그동안 국토계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광역권을 설정하여 국토개발에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지만, 광역경제권 정책이 최근 이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산업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또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박사)
-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위원
-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산업 육성방안(2008),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2007)

한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16개 시도 단위의 사업추진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임과 동시에 수도권 단일의 성장엔진에서 벗어나 국가 내에 복수의 성장엔진과 발전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성장전략이기도 하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은 그동안 지역의 경제산업적 연계관계가 행정구역의 칸막이로 인해 과도하게 분절화된 것을 복원하고, 세계적 경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간에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어떠한 경제산업적 배경에서 유발되었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광역경제권 정책이 기존의 지역정책 기조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 정책을 실효성 있고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II.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이론 동향

광역권(metropolitan area 혹은 megalopolis)은 2개 이상의 공간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단위 간에는 기능적 연계성이나 사회경제 및 자연적 특성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광역권 및 대도시권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단수 혹은 복수의 도시가 있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는 기능적 연계가 존재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은 부문별 광역권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중첩되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역경제권은 통근권이 나 생활권 같은 기초적 경제활동보다는 산업의 다양성과 인재의 양성, 수출과 외자유치 등과 같이 경제활동의 광역적 상호보완성이 강조되는 경제권이다.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를 지역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연결의 경제(economies of linkage)를 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면서 얻게 되는 비용 상의 이익을 말하는데,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절적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연결의 경제는 개별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원과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활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연결의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이 네트워크인데 최근 기업 간의 관계는 물론 도시와 지역 등 영토적 단위 간에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와 집적 경제의 이익이 낮은 중소규모 도시들의 경우 다른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지식·혁신역량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및 연결의 경제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광역경제권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국가(region states),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s), 슈퍼지역(Super Region) 등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이론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1996)에서 일종의 광역경제권인 지역국가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단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역국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지역으로서 지리적 크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국가를 규정하는 척도는 정치적 국경선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와 경제에서 자연적인 사업단위가 되기에 적절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는 지역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북부 이태리, 라인강 상류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웨일스, 실리콘밸리 및 베이지역, 도쿄와 주변지역 등을 들고 있다. 지역국가의 인구규모는 대체로 500만명에서 2천만명 사이이며, 세계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통신,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의 인프라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지역국가의 성공요건으로는 지역의 전문화, 차별화된 경쟁력, 여건변화에 대한 유연성, 지역마케팅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원섭, 2007). Scott(2001)는 세계화 시대에 거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세계도시지역이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Global City-Region은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지역주의 발전 모델의 지역 개념으로 세방화(glocalization)의 진전 속에서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추도시와 배후지역이 경제사회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보면 인구규모가 800~1200만 정도인 런던-잉글랜드 동남부, 파리대도시권, 뉴욕지역, 몬트리올-토론토-시카고 지역, 동경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슈퍼지역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Europe 2000』(1991)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자연적 경제

1) 지역국가의 구성요소로 4C(Communication, Capital, Corporation, Consumer)가 거론된다.

권역으로 슈퍼지역(Super Region)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초국경적 연계·협력이 미래의 주요한 정책적 관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1〉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과 세계도시의 비교

	Global City	Global City-Region
중심산업	초거대도시의 금융, 전문서비스업, 문화산업 중심	거대도시(100만 이상)와 그 배후지역의 제조업 및 인프라를 포괄
국제적 연계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 기능의 전문화된 분업 형태 → 국제적 보완협력체제	세계시장에서 첨예한 경쟁 관계 →국제경쟁력 강조
지역범위	하나의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	다중심적 또는 다집적지 형태. 지역간 제휴연합 형태

### Ⅲ.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 1. 광역경제권의 경제산업적 배경

기존의 시도 및 시·군·구와 같은 행정구역 이외에 광역권과 같은 계획지역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들 간 연계 및 협력이 불가피한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광역 SOC의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광역권은 국토계획의 오랜 주제로서 제1차 국토계획(1972-1981)에서는 4대권 8중권, 제3차 국토계획(1992-2001)에서는 9개 지역경제권, 제4차 국토계획(2000-2020)에서는 10개 광역권을 설정한 바 있다. 국토계획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고전적인 주제가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물론 이명박 정부가 지역정책의 핵심적 틀로서 광역경제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연유하지만,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산업적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국가 단위 경쟁을 뛰어넘어 지역 및 기업 단위 경쟁으로 확대되고,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민국가의 역

할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지역의 산업정책적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역들은 세계적인 지역 간 경쟁구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틀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접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두 번째 경제·산업적 배경은 199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은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갖추는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창출은 대학, 연구소,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지식의 활용은 제조업체와 일차산업이 입지해 있는 인접지역(광역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시와 인접지역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의 산업발전 트렌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기술의 복합화와 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화로 도시의 서비스산업과 인접지역의 제조업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고, 넓은 부지, 저렴한 토지가격과 같은 전통적 요인보다 고급인력과 정보의 확보 용이성과 같은 도시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간의 다학제적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산업, 업종, 기술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21세기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능, 특정 산업 중심의 특화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학문, 산업, 기술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역경제권의 네 번째 경제·산업적 배경은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형 산업발전 모델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지역기업들은 전문화와 혁신의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사이클이 단축되고 고객의 수요변화가 빠르며 기술개발에 더욱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전문화된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리스크를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혁신의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지역의 혁신환경을 필요로 한다. 동종 및 전후방연관 관계에 있는 기업들, 대학 및 연구소, 기업지원 서비스 기관 등이 일정 공간에 집적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산업클러스터가 지역기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긴요한 시기이다.

바로 이 4가지의 경제·산업적 배경, 즉 ①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

제 확보, ②혁신시스템의 활성화, ③기능과 산업의 다양성 확보, ④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경제의 중요성 증대가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정책의 추진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중추도시와 인접지역(광역도)을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계시키고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 □ 지역산업정책의 목표 및 기조의 변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은 정책의 기조 및 목표에서 중요한 변화를 내포한다. 광역경제권 단위의 접근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 중심의 자립적 발전을 지향하던 것에서 광역경제권을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간 경쟁에서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 내에서 해외의 경쟁거점과 경쟁하려는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형평성과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를 강조하던 것에서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산업-R&D-인력 등 정책부문간 연계의 강화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 간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적 차원에서의 연계·협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부문간 또는 중앙부처간 정책의 분절 또는 연계의 미흡을 지양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유관 정책 간 통합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개별 시·도로 직접 연결되던 사업추진체계에서 중간에 광역경제권을 거쳐 시도 단위에서 집행되는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산업정책, R&D정책, 교육인력정책, SOC정책 등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 재설정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관계에 있어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수도권도 다른 광역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산업연계체계를 강화하여 투자의 지역 간·산업 간 상호파급효과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수도권과 지방에 걸쳐 광역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산업(예: 경기-충청의 IT)이나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 병행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투자를 전제로 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 또는 수도권 공장설립 권리매매 제도(권리는 국가소유)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을 자유롭게 하되, 매매 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재원으로 지방 투자(산단 조성을 통한 임대)에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방식과 사업내용의 변화

광역경제권은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방식과 사업내용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기존의 사도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에서 사도간 협력 및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사업내용에서는 특정 지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특화센터 등의 혁신지원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것에서 특정 지역에 입지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또한 기존에 지역 내 산업혁신과 관련한 주요시설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과 기관을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광역경제권 정책에서는 기 설치된 혁신지원 시설과 기관간의 기능 분담과 상호 연계를 강조하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에서 벗어나 중추도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 IV. 광역경제권의 구축방향과 활성화 과제

1999년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의 4대 지역 특화산업 육성정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참여정부 시기의 광역 사도 단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자체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당시로서는 광역사도 단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광역사도 지자체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끌고 가는 주체이며,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역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광역경제권을 필요로 하는 경제산업적 배경의 등장과 함께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광역시도가 지역산업 육성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체이지만, 여기에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관련 시도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도 단위 정책 추진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광역경제권 정책의 핵심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일차적인 과제는 광역시와 광역도간의 경제·산업적 측면의 연계와 협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복원이라는 의미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이전에 광역시와 광역도간에 형성되어 있던 연관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회복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명직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던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현재의 시도 행정구역과 선출직 자치단체장 체계 하에서 지역 간 자발적인 연계·협력·통합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복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전보다 훨씬 정교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광역시와 광역도간의 연계체계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시도간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당장의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접 지역간에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치단체를 뛰어넘는 좋은 의사결정기구와 추진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의 추진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보다는 지역의 기업인, 상공인조직, 대학 및 연구소, 기업지원서비스기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직의 위계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는 광역시도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동력은 광역경제권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시도별로 4개씩 선정되어 있는 전략산업 중에서 광역경제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별로 중복성을 갖는 전략산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전략산업의 전후방연관관계와 상호연관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도별 전략산업의 단층적 연계구조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시도별 전략산업-기초지자체



단위의 자연산업'의 중층적 연계구조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추도시의 대학과 연구소 등의 지식창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광역경제권별로 발전역량을 비교하였을 때 특히 지식의 창출기능에서 광역경제권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나머지의 광역경제권은 지식창출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고, R&D거점을 육성하며, 고급인력의 정주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은 결국 중추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의 기술개발 역량, 혁신시스템, 지식서비스산업의 기반,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등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별 국제공항 및 항만 등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간에 분절되었던 경제·산업적 연계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사도 단위 지역정책을 보완하여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 단일 성장엔진에서 벗어나 국가 내에 복수의 성장엔진과 발전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성장전략이기도 하다.

## V. 수도권에의 시사점

광역경제권 정책은 그동안 지역정책의 기본 틀로 인식되어 왔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도 다른 광역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정책의 대상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큰 전환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만 무성하였으나 실체를 갖지 못하였던 것에 비해 광역경제권 정책의 틀 속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크게 열리게 된 것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수도권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가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최선두에는 수도권이 모범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 경쟁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선진국의 대도시권 및 중국의 신흥 성장거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에 지역발전의 역량은 단지 경제의 규모와 외형을 키우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물리적 집적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역량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이분법적 대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실질적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북부의 경계지역, 수도권과 강원도 경계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IT산업,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 중심의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간적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산업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입각한 광역경제권간 상호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접경지역의 초광역벨트를 활성화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것도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수도권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이 장강삼각주 지역이 연합하고 있는 사례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협력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역 간 협의회를 상설화하고, 연계협력의 대상사업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오혁, 2006, “네트워크도시의 연계구조와 발전전략”, 『공간과 사회』
- 김용웅, 2001,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이정식·김용웅 역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서울: 한울
- 이원섭, 200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이재하, 2003, “세계도시지역론과 그 지역정책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제6권
- 日本通産産業省環境立地局, 1995, 『産業立地要因と都市機能から見た経済構造變革期の産業の地方展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
- Scott, A J., 2001,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City-reg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9
- Porter, Michael, 2001, "Region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Scott. A. J. ed Global City-Regions-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